

KMI

북한해양수산물리뷰

2021년 1호
MAR 31 2021

발간년월 2021년 3월 31일(2021년 1호)
발행인 장영태 총괄 윤인주 감수 홍성걸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82-51-797-4724 FAX +82-51-797-4759

www.kmi.re.kr

목 차

[기획칼럼]	1
2021년 통일부 업무계획 분석 및 남북관계 전망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시대 해상방역과 남북협력 필요성	
유제선(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방·극지연구실 연구위원)	

[지상중계]	7
지자체 해양수산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1	

[북한알기]	12
한눈에 보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북한뉴스]	15
노동신문 해양수산 기사 (1~3월)	

[연구자료]	17
환동해 다자간 수산협력 제안 엄경호(효조상사 대표 · 동국대학교 북한학 박사)	



[기획칼럼]

2021년 통일부 업무계획 분석 및 남북관계 전망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년 남북관계 환경

2021년 1월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한미 동맹의 복원과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미 공조체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제연대와 동맹체제의 강화를 통해 미국의 외교안보적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한국에게 기회뿐만 아니라 도전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대 중국 견제 협력체제의 형성을 가속화할 경우 한중 경제관계의 의존도가 큰 한국의 딜레마는 커진다.

바이든 정부의 북-미 비핵화 협상방식은 트럼프 정부와 달리 상향식(bottom up)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확실한 성과가 담보된 협상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식의 파격적 정상회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될 경우 북한의 핵능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스몰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실용적 합의도출의 개연성도 있다.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해 자력갱생노선을 천명하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으며, 대남·대미 부문에서 현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파격적인 제안은 없었다. 대남 비난과 아울러 첨단무기 도입과 한미 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했지만 남측의 행동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3년 전 봄날로 돌아 갈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조건부 남북관계론인 셈이다.

대미관계에서 미국을 '주적'으로 표현했지만 과거의 '철천지원수'에 비해 수위를 낮추었으며 고강도 도발을 예고하지도 않았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단계라는 점과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을 자극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분간 북한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을 유보하면서 미국의 입장변화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북한 경제가 위기수준이라는 점에서 북-미협상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전략적 도발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2021년 통일부 업무계획

통일부는 2021년 1월 21일 청와대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5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추진과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한 비핵화·평화체제의 진전이다. 이를 위해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방안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평화체제 추동력 확보 방안이 제시되었다. 세부적으로 남북 당국 간 통신선 등 연락채널 복원 및 진전된 남북연락·협이기구 구축, 보건·의료, 기후, 이산가족상봉, 군사 등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와 남북합의 이행을 포함한 남북관계 발전 과제가 제시되었다.

둘째 추진과제는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상황적 요인을 감안해 보건·방역 등 인도협력의 일관된 추진 원칙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협력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방역과 산림·하천관리 등 환경협력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쌀과 비료 등 민생 협력 방안도 제시되었다.

셋째 추진과제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다. 대북제재 등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관광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사업 추진방안이 제시되었다. 세부적으로 민·관 합동 남북행사, 사회·종교단체 교류 지원, 학술문화 협력사업, 도교올림픽 등 주요 국제체육행사 협력 등 사회문화 교류협력 방안이 제시되었다.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 물물교환 방식 교역 추진, 북한 개별방문 지원, 철도·도로를 비롯한 공공인프라 구축, 개성공단사업 정상화 여건 조성 등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 방안이 제시되었다.

넷째 추진과제는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남북 접경지역 평화 증진이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의 문화, 산림, 생태·환경 협력 모색, 남측지역의 실태조사 등 실현 가능한 사업의 우선 추진계획이 제시되었다.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구상」 구체화,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판문점 견학 재개, 「DMZ 평화의 길」 사업 촉진, DMZ-한강하구·서해 5도 등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추진과제는 남북관계 제도화와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이다. 이를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 법제도 정비 방안이 제시되었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과 '지역중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되었다.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북한 및 남북회담 사료 등 정보공개 및 활용방안 개선, 「통일플러스(+)'센터」 확대, 적극적 통일 공공외교 전개 방안이 제시되었다.

2021년 통일부 업무계획은 대북제재 지속, 남북 및 북·미관계 교착,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감안하면서도 창의적 방식을 통해 실현가능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과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남북관계 전망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에 해당하며, 남북관계에는 여러 도전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2021년 초 미국의 신정부 부가 출범하고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의 국가전략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에도 일정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 성 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 정 박 부차관보, 그리고 국가안보회의(NSC)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북한 전문가들을 외교안보라인 전면에서 포진시키고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review)에 들어갔다. 대북정책 재검토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전략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

로 보인다. 반면 중국과 이란 문제 등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는 비교적 신속하고도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3월 16일 일본 방문 당시 대북전략에 있어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블링컨 국무장관이 1월 31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추가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가 대북 정책의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를 주시하며 버티기형 상황관리 전략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 능력국가(nuclear capable country)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의 장기적 방치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ICBM 발사 없이 핵 물질 생산 증대 등 수평적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심화시킬 개연성도 남아있다. 다방면의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언제까지 '전략적 인내'의 시간을 지속할지도 주목해야 한다. 김여정 부부장은 3월 15일 한미군사연습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발표했지만,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미국에 대해서는 '잠 설치 일'을 만들지 말라며 경고하면서도 수위는 조절했다. 북한의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완수를 위해서는 대외적 고립의 탈피와 남북관계 발전을 필요로 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의 장기교착은 북한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북·미 모두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에서 2021년 북·미 비핵화협상의 조기 본격화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남북 및 북·미관계 교착국면이 지속될 개연성이 크며, 이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가능성이 높아질 개연성을 의미한다. 남북관계 역시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조건부 남북관계개선론을 제시한 만큼, 공은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상황이다. 남북관계를 통한 해법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숨 가쁜 남북, 북·미 정상외교를 견인한 것은 한국이었다. 한국은 북한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시키고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동력을 마련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선언에 영변 핵 단지의 영구폐기 의사를 명문화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도출한 것도 우리의 역할이었다.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을 서울로 초청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가역적 입구의 형성이 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의 동력을 마련하는 일이다. 가능하면 금년 상반기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위해 특사 또는 공식·비공식 남북 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간략형 또는 화상회의 등 실용적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백신협력과 도쿄올림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남북공동의 문제이자 북한체제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남북협력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교훈삼아 도쿄 올림픽 북한 참가를 견인해 2021 도쿄 하계올림픽-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2032 남북 공동올림픽 등 동아시아 릴레이 평화올림픽 전략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도쿄 올림픽이 재연기 또는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동아시아 릴레이 평화올림픽 전략을 본격화할 경우 향후 남북 및 한중일 협력관계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와 병행해 북·미 비핵화협상 촉진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교훈은 비핵화협상의 주선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실질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북·미 비핵화 합의 도출과 이행을 견인하는 한국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창의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획칼럼]

코로나시대 해상방역과 남북협력 필요성

유제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방·극지연구실 연구위원)

해상방역 이슈

사전적 의미로 풀이하면 방역(防疫)은 “전염병의 유행 및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원, 감염경로, 개체의 감수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갖가지 처치”로 정의된다. 방역의 공중보건학적 의미는 감염병에 의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기 전에 국가가 앞서서 그 유행을 막고 침입을 예방하는 대책과 실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방역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국경에서부터 행해지는 검역인데, 이는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검역의 수단으로 공항, 항만, 육로 등에서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화물 등을 검사, 격리, 방역하는 등의 위생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활동이 시행된다¹⁾.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는 감염병의 발생에 관한 감시 및 통제가 용이한 육상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에 반해, 해상방역은 항구, 항만 등 출입국 지점이나 해상에서 통제가 수월한 양식장에 국한시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해상에 걸쳐 방역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해상방역 측면에서 보다 확장적이며 미래 선도적인 기술 개발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국가적인 고민과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며, 해상에서 발생했던 방역 관련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19.

해상 밀입국 선박

2020년 5월 23일경, 충남 태안에서 중국인 밀입국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보트가 충남 태안지역에서 발견됨에 따라 크게 보도된 적 있었다. 더욱이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20년 6월 22일경에도 중국 쪽에서 2명의 남성이 소형 보트를 타고 전남 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그 뒤에도 중국인의 밀입국 관련 기사는 몇 차례 더 보도되었다. 문제는 이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팬데믹 상황을 이루던 때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검역 절차도 거치지 않은 밀입국자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자칫 감염병의 주요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고, 이 밀입국자 체포 사건은 해당 지역은 물론 전국을 긴장시켰다.

야생동물의 해상 유입

2019년 5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 자강도 우시군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는 후 국내에서는 2019년 9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등 주로 서해안의 북한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는 야생 멧돼지가 임진강이나 해상을 통해 넘어오는 과정에서 간접적인 접촉으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9년 7월경 및 11월경, 서해안 격포 해상 및 동해안 강릉 해상에서 멧돼지들이 수면을 떠다니다 발견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²⁾.

한편,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는 닭, 칠면조, 오리 등 가금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에 속한다. 그런데, 이 전염병의 특징은 전파 경로와 관련된다. 이 전염병의 전파 경로는 특히 야생조류의 이동 경로와 연관성이 깊다³⁾. 이 전염병은 이제 국내에 풍토병이 되어가고 있고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막기 어려운 것이 인위적 통제가 불가능한 야생조류의 이동에 따른 전파이기 때문이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서해안 지역의 가금류 사육농가이다. 서해안은 지형적으로 간척지, 강 등 철새 도래지가 많고 가금류의 사육농가가 밀집해있다.

야생 수산동물의 유입

1998년 8월, 남해안 통영, 거제, 여수 등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육 중인 돌돔들이 이리도바이러스병에 의해 60% 이상 폐사한 사건이 있었고, 그 후 충남 천수만으로 이리도바이러스병이 확산되었다. 지금은 이 바이러스가 국내 동해, 서해, 남해 등 모든 해상에서 상존하는 토착병으로 정착해 우리나라에서 돌돔 양식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돌돔의 이리도바이러스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주된 원인은 이 질병의 국내 유입 이후 질병전파를 제대로 막지 못해 여기에 감염된 돌돔 치어들이 자유롭게 유영하면서 주변 양식장으로 감염 확산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

2) “부안해경, 격포 인근 해상에서 멧돼지 포획”, 『전북도민일보』, 2019년 7월 4일자.

3) “조류인플루엔자, 서해안 따라 수도권 북상”, 『동아일보』, 2016년 11월 21일자.

4) 김명석, “방역의 개념 및 중요성”, 『아쿠아인포』, 2011년 2월호.

코로나시대 해상방역을 위한 남북협력

지금까지 국내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인(人)·수(獸) 감염병과 수산생물 전염병의 발생사례들은 대부분 감염병의 발생경로가 해외에서 발생한 뒤 국내로 유입된 경우이다. 국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유입되는 경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을 통과하는 육로, 항공, 또는 해상이다. 국경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한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치명적인 인적·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과 공중보건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상방역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은 곳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북한도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1년 이상 국경을 봉쇄하고 공세적인 방역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해상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어업과 소금 생산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지며 실제로 북한 어장에서 활동하는 어선 수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된다.⁵⁾ 2020년 9월, 서해 해상 수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한 과잉대응으로 해상 경계를 강화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경계가 명확하고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육상과 달리 한반도 해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앞서 해상방역 이슈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과 동물의 우발적인 해상 유입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동·서해 접경해역은 줄곧 군사적 긴장이 감돌면서 단절된 공간인 것처럼 보였지만 코로나19는 한반도가 생명공동체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신종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재발과 변이를 예견하고 있으므로 남북협력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상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가금류·조류·어류에 대한 방역 뿐 아니라 조류(潮流)의 영향으로 인한 어선과 사람의 표류·표착(漂着)에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은 향후 해상방역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6월에 북한은 군 통신선과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연락망을 모두 차단시킨 바 있다. 따라서 양측 접경해역에서 일어나는 해상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동해·서해지구 군 통신선부터 복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상으로 유입되는 야생동물과 선박 등에 대한 남북공동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남북한 내부의 방역체계 사정에 따라 양측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표는 어떻게든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하나라도 더 보호하는 것이다. 이 목표에 있어서만큼은 정치적 견해를 떠나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1년 이상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최근 조심스럽게 문을 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여름부터 거의 전면 중단되었던 북한-중국 간 육로 운송은 식량부족을 돕는 원조물자를 중심으로 4월 중순 단둥-신의주 열차 왕래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⁶⁾ 북한은 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의 코로나19백신 지원 대상국(92개국) 중 하나로 선정되어 올 상반기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이기도 하다.⁷⁾ 아직은 남북한 모두 코로나19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에 집중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백신 접종 이후 집단면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남북협력을 논의해 볼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는 접경해역의 해상방역 뿐 아니라 항만·수산 검역 등 다른 방역체계에 대한 남북협력도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5) “북한, 코로나19로 어업 활동 위축... '국경 봉쇄' 영향”, 『뉴스1』, 2021년 2월 일자.

6) “이와중에... '북한, 중국과 다음달부터 왕래 재개'”, 『서울경제』, 2021년 3월 24일자.

7) “北 5월쯤 코로나 백신 받을 듯... 남북·북미대화, 5월부터 가능?”, 『뉴스1』, 2021년 3월 13일자.

[지상중계]

지자체 해양수산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1

- 부산시,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 담당자들과 함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연구진은 북한해양수산리뷰를 발간하며,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는 북한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에 의지와 관심이 있는 다양한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2020년 재발간 후 1년을 맞아 이러한 취지를 살려 지자체들과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보았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남북협력 관계자들을 모시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지면을 빌려 간단히 소개한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해양수산 남북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향후 협력방안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담 개요

- 일시·장소: 2021년 3월 4일 오후3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참석: 윤인주 연구위원(KMI), 임종금 비서관(경상남도), 황교욱 연구위원(경남연구원),
현은희 팀장(부산시 남북협력팀), 권태상 연구위원(부산연구원), 진희권 연구원(인제대 통일학연구소)

부산, 남북상생 교류협력 프로젝트 5개 전략 44개 사업 추진

항만·물류, 수산 분야 남북교류에 의지 높아

- △ **KMI 윤인주 연구위원**: 바쁘신데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하다.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해양수산 남북협력 현황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 **부산시 현은희 팀장**: 부산시는 2018년 ‘남북상생 교류협력 프로젝트’ 5대 전략 35개 사업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0년에 44개 사업으로 재구성했다. 이 중 북측 수역 입어, 수산가공 협력 등의 해양수산 관련 사업이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당시 부산시장이 북한을 방문해 한반도 ‘항만물류도시협약체’를 제안한 바 있으나 구체적 답을 듣지는 못했다.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 상 항만·물류, 수산 분야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의지는 높다. 하지만 현재는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 △ **KMI 윤인주 연구위원**: 과거에는 남북협력사업 의제에 대한 요청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남북관계 상황 상 대북제재 하에서 실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에서 말씀하신 사업들은 대체로 대북제재 대상인 듯하다. 고민이 많으실 듯하다.
- △ **부산연구원 권태상 연구위원**: 실제 사업 진행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사업 준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지식공유사업)를 검토한바 있다. KSP의 경우에도 경제뿐만 아니라 원산의 도시 관리, 해수욕장 같은 해양휴양시설 관리에 대한 북한 측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주제로 도시 간 교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KMI 윤인주 연구위원**: 부산연구원에서 작년에 부산시의 북한 협력도시 선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간단한 소개 부탁한다.
- △ **부산연구원 권태상 연구위원**: 작년에 협력도시 선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어느 한 도시를 특정하기보다 산업별로 접근했다. 원산은 관광·수산, 나선은 항만·물류와 관광, 함흥은 북한 내 물류 중심지, 청진은 북한의 전통적 산업도시로 중화학공업 등에서 접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올해는 연구원 내부에서 연구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평화통일교육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 수산협력 4대 원칙을 세우고 양식분야 협력 방안 모색

국제기구를 통한 만남과 협력도 고려

△ **경남 임종금 비서관**: 경남은 수산분야 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 식량위기 해소, 연안생태계 회복 및 생물다양성 증진, 북한 내 자원투입 최소화(전기, 사료 등), 국제단체와의 직간접 지원교류라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현재는 미역, 다시마, 홍합 등 북한 식량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면서 투자가 적은 양식 분야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본 시설에 종자만 뿌리면 가족단위 규모의 노동력으로도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남북한의 종자를 연계해 종자 간 경쟁성, 다양성도 꺾을 수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2조에서 “정부는 남북한의 수산업·어촌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 **경남연구원 황교욱 연구위원**: 현재 한반도 정세는 구조적으로 교착상태라 판단되며, 북한 내부 동향을 보아도 희망적이지 않다. 남북관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자체나 민간의 교류협력도 어렵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남북 간 직접협력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PEMSEA(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동아시아해역환경관리협력기구)를 통한 간접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PEMSEA에 남북한 모두 정식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3년마다 열리는 회의가 올해 12월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당국 간 미팅 뿐 아니라 지방정부 참여도 가능하며, 남측은 창원시와 안산시가 가입되어있다. 창원원은 마산만의 오염 정화와 관련하여, 안산은 시화호가 PEMSEA의 핵심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북한도 오래 전에 PEMSEA에 가입했으며, 특히 남포시에 연안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남포 연안뿐 아니라 대동강 수역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북한이 해양관광지로 적극 개발 중인 원산시가 그 다음 대상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올해 12월, 캄보디아 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남북관계 문제와 코로나19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심포지엄, 기획포럼 등의 형태로 가벼운 만남을 추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과 북이 각자 PEMSEA를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연안통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사항들이 개선되었는지 발표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형태이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PEMSEA와 직접 연관이 있고 사업 경험도 많은 KMI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재개, 화객선 남북공동 건조사업도 검토해 볼 만 하다. 과거 북한의 경제시찰단(1992년)이 거제도의 조선소를 방문한바 있으며, 2007년에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1차 회의가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바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부산, 울산, 경남 간의 느슨한 협의체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절실

- △ **KMI 윤인주 연구위원**: 부산도 PEMSEA에 가입하면 좋을 것 같다(가입 추진 중).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의 관리 노하우를 원산에 소개하는 등의 사이드미팅도 좋을 것 같다. 경남은 경험과 관심이 있는 농업과 수산업을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 **인제대 통일학연구소 진희권**: 현재의 남북관계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가변성은 늘 존재하며,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의 주체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해운·항만 분야는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주체가 명확하지만 수산업은 다양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산업은 농업에 비해 남북교류협력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체도 부족하다.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비해 추진되는 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 △ **부산시 현은희 팀장**: 접경지역 도시들은 DMZ 평화, 보건협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협력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연구원에서 큰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산도 해양의 평화적 공유와 이용 등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에 남북협력 전담부서가 없다고 하는데, 상징적인 문제라 생각한다. 해양수산 남북협력을 위한 기초조사 등이 중요하며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해수부와 KMI 같은 연구기관은 물론, 지자체 등까지 모든 유관기관을 포괄하는 네트워크와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
- △ **경남연구원 황교욱 연구위원**: 옳은 말씀이다. 해양의 잠재력이 클뿐더러 남북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최근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남북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북한의 해양쓰레기가 동해를 통해 남한으로 많이 떠내려 오고 있다. 백령도, 연평도 등에도 북한의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 온다고 한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해양은 남북이 함께 관리해야 하는 공동과제다.
- △ **부산연구원 권태상 연구위원**: 육지 중심으로 접경을 바라보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다도 접경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부산의 경우 연안환경, 홍수방지, 상하수도, 재해·재난, 낙동강 오염관리 등 도시 관리 경험을 기반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사업을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협력 대상을 선정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 PEMSEA가 적합한 파트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 **KMI 윤인주 연구위원**: 코로나19가 진정되고 12월 캄보디아 회의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북한과 캄보디아는 외교관계도 있으니 참석 가능성도 높을 듯하다. 지자체 사업 진행과정에서 KMI가 지원할 만한 일을 알려 준다면, 그 문제를 연구과제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

- △ 부산시 현은희 팀장: PEMSEA를 통해서 북한과 만날 수 있지만 북한 수산부문 관계자 초청도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최근 부산에서 KSP를 고민한 바 있다. 준비를 구체화해서 단기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부산연구원 권태상 연구위원: 물론 당장 부산에 초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작은 연수가 아니라 세미나 형식이 아닐까 한다. 장소도 중국 연변대, 러시아 극동연방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남이나 KMI도 함께 참여해서 연변의 '두만강포럼'을 본 따서 '낙동강포럼' 같은 명칭으로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
- △ 인제대 통일학연구소 진희권: 아까 잠시 통일교육 말씀을 하셨는데,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으로 안다. 시대에 맞게 콘텐츠가 변해야 하며, 지역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KMI는 바다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도 진행하는 만큼, 바다를 매개로 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 △ KMI 윤인주 연구위원: 하실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아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마무리 했으면 한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 같다. 바다를 매개로 남북협력을 고민하는 주체들 간에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나누었으면 한다. 공동워크숍 등도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북한알기]

한눈에 보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북한의 조선노동당 대회란?

■ 조선노동당은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는 조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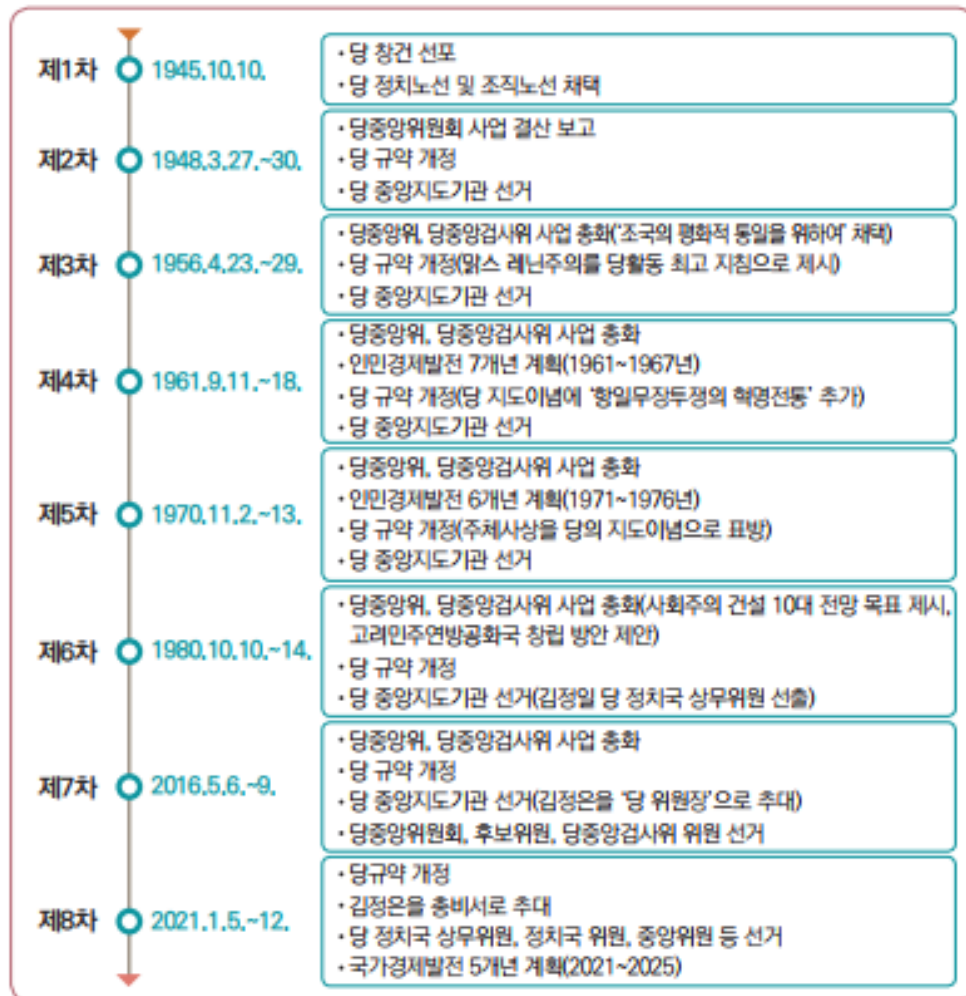
이른바 당-국가체계(Party-state System)에서 당은 유일사상을 근간으로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치한다. 조선노동당은 정치권력을 독점하며 사회의 모든 기구나 단체를 예속하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통치 방법으로, 북한의 정치체계가 소련의 영향 하에서 공산주의적 전통에 따라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일반적으로 유일당은 공산당을, 유일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뜻한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유일당은 조선노동당이며 유일사상은 주체사상인데, 이는 공산주의적 전통이 북한의 역사 속에서 변형된 예라 할 수 있다.

■ 당 대회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당 대회에서는 당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할 수 있으며, 주요 정책과 정치 노선을 결정한다. 또한 당 최고지도자를 추대할 수 있으며 대내외에 다양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파한다. 과거 조선노동당 규약은 5년에 1회 당 대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했으나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최 주기는 불규칙적이었다.

북한이 당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못한 것은 국정 운영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정책 기조를 공개적으로 공표하기 어려웠던 내부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 북한은 36년 만에 7차 당 대회(2016)를 개최한 데 이어 5년 만에 다시 8차 당 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 통치 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대내외에 보내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역대 조선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자료: 통일교육원, 『2019북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8), p. 39를 바탕으로 보완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무엇을 결정했나?

■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제8차 당 대회는 김정은 위원장의 개회사와 사업총화 보고(5~7일)후 토론을 진행하고 결정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당 규약을 개정해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총비서'로 고쳐 김정은 위원장을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했으며, 당의 주요 지도기관 인선 결과도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지난 5년 간 최대 성과는 국가의 '전략적 지위' 상승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에 대해서는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해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다. 아울러 현재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며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7차 당 대회와 8차 당 대회의 경제발전계획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 북한 조선노동당 7차 대회와 8차 대회 경제발전계획 비교

		제7차 대회	제8차 대회
경제발전계획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2016~2020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2021~2025년)
대내 경제	중점사업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기계, 농업, 경공업	금속, 화학, 농업, 경공업
	경제관리	•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 • 국영사업망 발전 • 우리 실정에 부합, 최량화·최적화 위한 경제관리 방법
	특징	과학기술의 성장 견인 강조	재정, 금융, 가격 공간의 활용 강조
대외경제		• 가공품수출, 기술봉사무역 확대 • 합영·합작과 경제개발구 개발 • 관광사업 활성화	관광사업(금강산관광지구 개발)

*자료: 홍제완 외,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2):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KINU 온라인 시리즈』, CO21-02, 2021.1.15., p. 4.

조선노동당 총비서 추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내외 위상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고 예우 차원에서 ‘총비서’라는 직책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해 김정은을 김일성, 김정일과 동일한 직책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북한은 당의 최고 지도부라 할 수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5명)을 비롯해 정치국 위원(10명), 정치국 후보위원(11명)을 대거 교체했으며 핵심 실무 조직인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바꾸고 기존 17명의 인원을 7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대해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은 실무능력 위주의 인사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김정은 측근 인물들이 핵심 요직에 대거 발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8차 당 대회에서는 이외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으나 지면 관계상 중요한 변화만 요약했다.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북한은 당적 쇄신을 실현해 내구력을 다지고 김정은 집권 2기 체제를 출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한 김정은 2기 체제에 경제발전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 그 행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북한뉴스]

노동신문 해양수산 기사 (1~3월)

〈2021년 1월〉

	보도일자	제 목	내 용
노동신문	1.21.	개간된 간석지에 풍년나락 설레이게 할 일념 안고	- 제8차 당대회에서 간석지 이용율을 높을데 대한 강력한 과업 제시 - 평안북도 농업부문 간부들, 간석지 농사에 알맞은 염기에 강한 종자를 심고 특성에 맞게 재배하기 위한 과학적 영농방법 모색 - 간석지 농사에 충분한 물을 데는 것은 토양의 염도를 낮추어 벼의 생육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 많은 양의 물을 제공하기 위해 관개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음
	1.24.	월도간석지건설장에서 20만산대발파 진행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월도간석지 2구역 3호 방조제 공사 진행
	1.30.	간석지포전에 하루빨리 생명수 흘러들게	- 남포시에서 개간된 간석지에 농사를 지을 준비에 역량 집중
	1.30.	현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조국의 대지를 더욱 넓혀가리	- 평안북도 월도간석지 건설 소식 - 보산지구 방조제 공사, 월도지구 방조제 보강 및 성토공사 진행 중

〈2021년 2월〉

	보도일자	제 목	내 용
노동신문	2.4.	20만산발파에 이어 10만산발파 진행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월도간석지 2구역 1차물막이 공사 진행 중
	2.7.	해안건설목표를 현실성있게	- 함경남도 신포시, 흥원군, 락원군에서 해일피해에 대비한 해안 보호시설물, 바람막이숲, 해안방조제와 해안도로 건설 사업 진행 중
	2.15.	원산시의 불야경을 볼 때마다	-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로 원산군민발전소가 건설되어 강원도의 전기 사정이 개선되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을 칭송
	2.20.	유엔환경계획 산호초사멸위기에 우려	- 유엔환경계획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 수온 상승으로 산호초가 사라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
	2.21.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들을	- 제8차 당대회에서 수산부문을 인민들의 식생활과 직결된 3대 부문의 하나로 규정 -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수산물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일 것을 수산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 - 제8차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물고기먹이첨가제 연구에 열중

	보도일자	제 목	내 용
노동신문	2.22.	소금생산의 집약화, 기계화, 현대화에 역량 집중	- 소금생산의 집약화, 기계화, 현대화에 열중 - 지하초염수(염지하수)를 통한 소금 생산 공정 확립에 역량 집중 - 광량만제염소, 금성제염소, 남양제염소 등에서 소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26.	월도간석지건설장에서 25만산대발파 진행	- 월도간석지 건설장 2구역 1차 물막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진입

〈2021년 3월〉

	보도일자	제 목	내 용
노동신문	3.1.	개건현대화된 신포물고기통조림공장 준공	- 2.28. 신포물고기통조림공장 개건·현대화 준공, 수산상 송춘섭 등 참석 - 통합생산체계 구축, 위생 안전성 보장 - 2015년 5월 김정은 위원장이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를 찾아 신포물고기통조림공장 개건·현대화 지시 - 기본생산 건물, 물고기 가공장, 절임장, 과학기술 보급실, 문화후생시설, 합숙소, 식당, 탁아소, 유치원 등 건설
	3.6.	15만산대발파 연이어 진행	- 월도간석지 건설장 2구역 3호방조제 공사 진행 중
	3.10.	강하게 내밀어야 할 해안보호시설공사	- 해안선이 긴 북한에서는 해안방조제를 비롯한 보호시설을 잘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3.18.	양어공의 기쁨	- 평양시 양어관리국 대동강 양어 및 종어생산 공급소 생산부원 김창길의 생산 성과 소개
	3.19.	새로 개건된 해주대경가공사업소 조업	- 해주대경가공사업소 개건 조업 - 김줄임을 위한 원료 주입기, 살균기, 건조기 등 설비 - 통합생산지휘체계 및 위생통과실, 공기조화 및 정화설비 설치, 무균화무진화 실현
	3.21.	청진시 포항광장의 면모가 새롭게 일신된다	- 청진시 당위원회 포항광장 재정비 사업 진행

[연구자료]

* 최신 연구를 소개하는 코너로, 저자의 주장은 KMI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환동해 다자간 수산협력 제안

- 붉은대게, 오징어, 명태를 중심으로¹⁾

엄경호 (효조상사 대표 · 동국대학교 북한학 박사)

환동해산 붉은대게, 오징어, 명태 산업 현황

환동해는 난류(暖流)와 한류(寒流)가 만나는 바다로 난·한류성(暖·寒流性) 어종과 중류성(中流性) 어종이 섞여있는 특징이 있다. 환동해에는 약 4,000~6,000종의 어종(魚種)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확인된 어종은 약 600여종이며 수산업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어종의 수는 약 50여종이다.²⁾ 환동해에는 붉은대게, 오징어, 명태(이하 3품목)가 어획량이 많고 산업적 비중이 큰 어종³⁾이면서 연안국 간 산업협력을 유발하고 있다.

동북아 역내(이하 역내)에서 이들 3품목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붉은대게, 오징어, 명태는 산업적 형태와 협력 방법이 각각 다르면서 연안국 간 갈등 구조와 성격도 다르게 나타난다. 붉은대게는 정착성 어종이지만 어장 확보를 둘러싼 한·일 간 어업 갈등이 발생한다. 오징어는 경계 왕래성(회유성) 어종으로 연안국 경계를 왕래하는 과정에서 남·북·일·러·중 어획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명태는 어장을 둘러싼 갈등은 없지만 원료와 제품의 유통경로와 무역을 둘러싸고 국가 간 갈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남한과 주변 국가들의 일본산 명태 수입 금지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문제제기와 반발 등이다.

1)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환동해 다자간 수산협력에 관한 연구」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함

2) 島津・猛, 『一、東海の構造と漁業』, pp. 215~219; 金日成, 『水産業を發展させるために』, (東京: 白峰文庫)、チュチュ思想国際研究所, 1991.

3) 심호진, “동북아 수역의 수산자원 보존관리 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40(2), 2009, p. 83

중국의 환동해 진출과 남한의 역할

3품목의 다자간 협력의 중심 역할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산 원료, 가공품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에 수출하면서 역내 수산물 유통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역내 3품목 산업은 국가 간 정치·군사적 영향으로 그 경로가 단절되거나 왜곡되어 왔는데 중국 수산업은 남·북·일 정치·군사적 긴장 국면을 통해 환동해에 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긴장의 연속은 중국 수산업이 환동해에 진출하는 물적 확대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동해는 정치·군사적으로는 한·미·일 각각의 동맹과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북·중, 중·러 협력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연안국 간 경쟁은 무정부 성격에 가깝다. 수산업 차원에서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관련 당사국들이 자국이익 극대화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다를 둘러싼 무정부적 경쟁과 정치·군사적 긴장은 수산업 유통체계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왜곡의 중심에는 중국이 자리하고 있으며 수산·어업 분야의 비협조 게임(non-cooperative game)에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국가이기도 하다.

한편 3품목의 역내 산업유통 구조를 좀 더 들여다보면 남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붉은대게의 최대 공급 국가는 남한이다.⁴⁾ 남한의 원료공급에 의해 일본(일부), 미국, 유럽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오징어는 최근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수산물로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주요 소비국인 일본에 비해 약 10배 이상 많다.⁵⁾ 또한 북한산 오징어, 중국산 오징어, 원양산 오징어 등의 상당 부분이 부산항에서 검품되고 경유된다. 명태는 우리 국민이 가장 즐겨 먹는 수산물 중 하나로 중량 기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규모 1위를 차지한다.⁶⁾ 동북아에서 주요 명태 소비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인데, 일본은 명태 연육이 주원료로 되는 제품의 소비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 식용 수요가 꾸준하다.⁷⁾ 이렇듯 3품목의 역내 산업유통에서 남한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북제재 완화 이후 수산 분야 남북협력을 통해 그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차형기·양재형·이성일·윤상철, “동해에서 서식하는 대게류(*Chionoecetes* spp.)의 재생산 및 분포 특성”, 『KFAS 한국수산과학지』, 47(5), 2014, p. 638.

5) 오징어는 어획량이나 수출입에서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 내 소비도 늘어나고 있으나 가공 후 재수출이 많으며 동북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주요 소비처이다. “세계 오징어 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어민신문』, 2014년 8월1일자.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오징어 소비량은 약 4~6kg으로 일본(약 300g)의 10배를 상회한다. 해양수산부, “2018년도 수산물 유통산업 실태조사”, 2019.5; 일본 수산청 수산물소비상황, www.jfa.maff.go.jp/j/kikaku/wpaper/h29_h/trend/1/t1_2_4_2.html

6)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9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p. 367, 488.

7) 김선래·김은미, “한국의 러시아 명태 수입과 러시아 수산업투자 고찰: 러시아 명태 수입 의존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시베리아연구』, 18(2), 2014, 65. 명태의 최대 자원국은 러시아이며 최대 수출입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수입명태의 대부분을 필렛, 어분, 스테이크용, 건조품 등으로 가공하여 미국, 유럽, 한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직접 식용은 명태를 냉동, 냉장, 또는 건조 등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소비하는 형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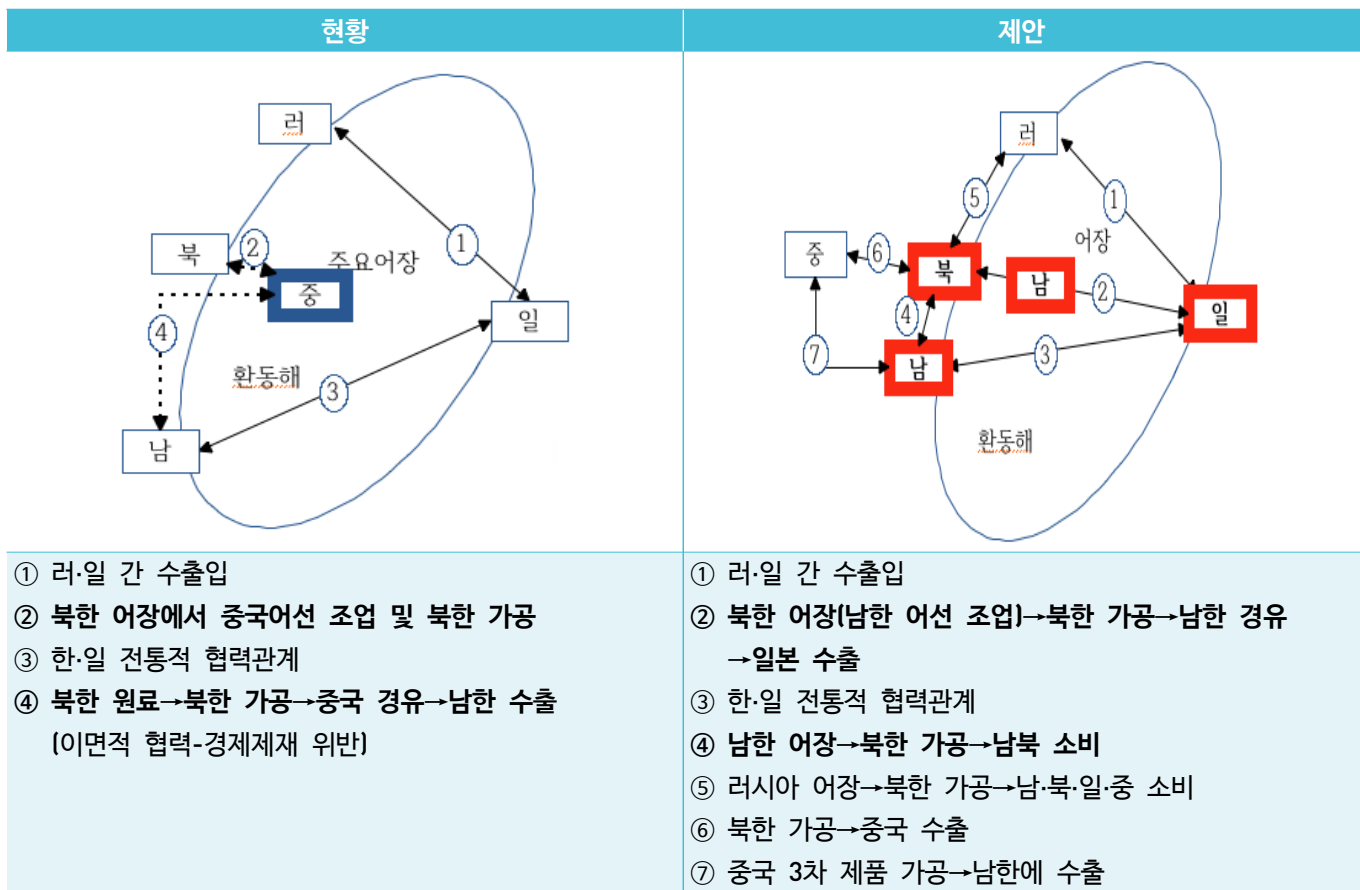
붉은대게, 오징어, 명태의 산업협력

붉은대게는 정착성 어종으로 남·북·일·러 연안국이 어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내 산업 유발효과가 크고, 연안국 간 수출입이 활발한 품목이다. 붉은대게는 전 세계에서 환동해 수역에서만 어획할 수 있는 수산물이다.

중국산 붉은대게살은 부산을 통해 남한으로 수입되고 있다. 남한으로 수입된 중국산 붉은대게살(HS CODE 1605101091) 중 일부(주로 다리살)는 일본으로 재수출되기도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는 중국이 북한 어장에서 조업하여 북한에서 가공하고 중국을 경유하여 남한으로 수출하고 있다. 향후 남북 수산업협력이 가능해지면 북한산 붉은대게 공급의 중심 역할은 남북한이 담당할 수 있다. 우리 어선들이 우리 어장이나 북한 어장에서 조업한 붉은대게를 북한에서 가공하여 국내에서 소비하거나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수요 측면의 중심 역할은 붉은대게 최대 소비국인 일본이 될 것이다.

〈그림 1〉 붉은대게 수산업협력 현황과 제안



오징어는 경계 왕래성 어종으로 남·북·일·러 4개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어 있고⁸⁾ 특히 남·북·일 3국에서는 수산업 차원의 가치유발효과가 크다. 어획과 가공, 운송에 있어서 남·북·일 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참여하게 얽혀있는 수산물목이다.⁹⁾

환동해 오징어 협력 구조는 연안국의 수요에 의해 형성된 경로라기보다 중국 중심 공급망 형태를 띠고 있다. 오징어 협력구조는 단선적이며 좀 더 포괄적인 다자협력으로의 확산이 어려운 구조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는 중국이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북한 어장에서 조업하여 북한 또는 중국에서 가공하는 오징어 물량이 많고 일부가 남한에 유입되거나 한·일 간 유통경로를 통해 일본에 유입된다.

향후 제안하는 협력 방안에서 지리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은 북한이 담당한다. 붉은대게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어장에서 조업한 오징어를 북한에서 가공하여 남북이 소비하거나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다. 남한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소형인 북한어선의 보호협력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중국 중심의 유통이 북한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이면적 거래가 표면적 거래로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림 2〉 오징어 수산협력 현황과 제안

현황	제안
①~④ 남·북·일·중 조업 [오징어 이동경로를 따라 남·북·일·러 수역을 넘나든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부여받은 어획권터의 일부를 중국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중국 어선은 북한 국기를 사용한다] ⑤ 북한 어장→북한·중국 가공 ⑥ ⑤의 일부는 남한에 유입 ⑦ 한·일 전통적 협력관계 ⑧ ⑦의 경로를 이용하여 일본에 유입	①~④ 남·북·일·중 조업 [오징어 이동경로를 따라 남·북·일·러 수역을 넘나든다] ⑤ 북한 어장→남북한 가공→일본 수출 ⑥ 한·일 전통적 협력관계 ⑦ 북·중 협력 ⑧ 남한 어장→남북한 가공→남북 소비

8) 荒井康宏, 宇賀神義宣, 熊谷一栄, “水産物流通広域漁港整備に関する一考察”, 《新たな手法による地域計画づくりに関する調査研究》, 日本沿岸域学会研究討論会, 2001, p. 146; 〈図-1〉 スルメイカの近年の主漁場および漁期 (1960年代 後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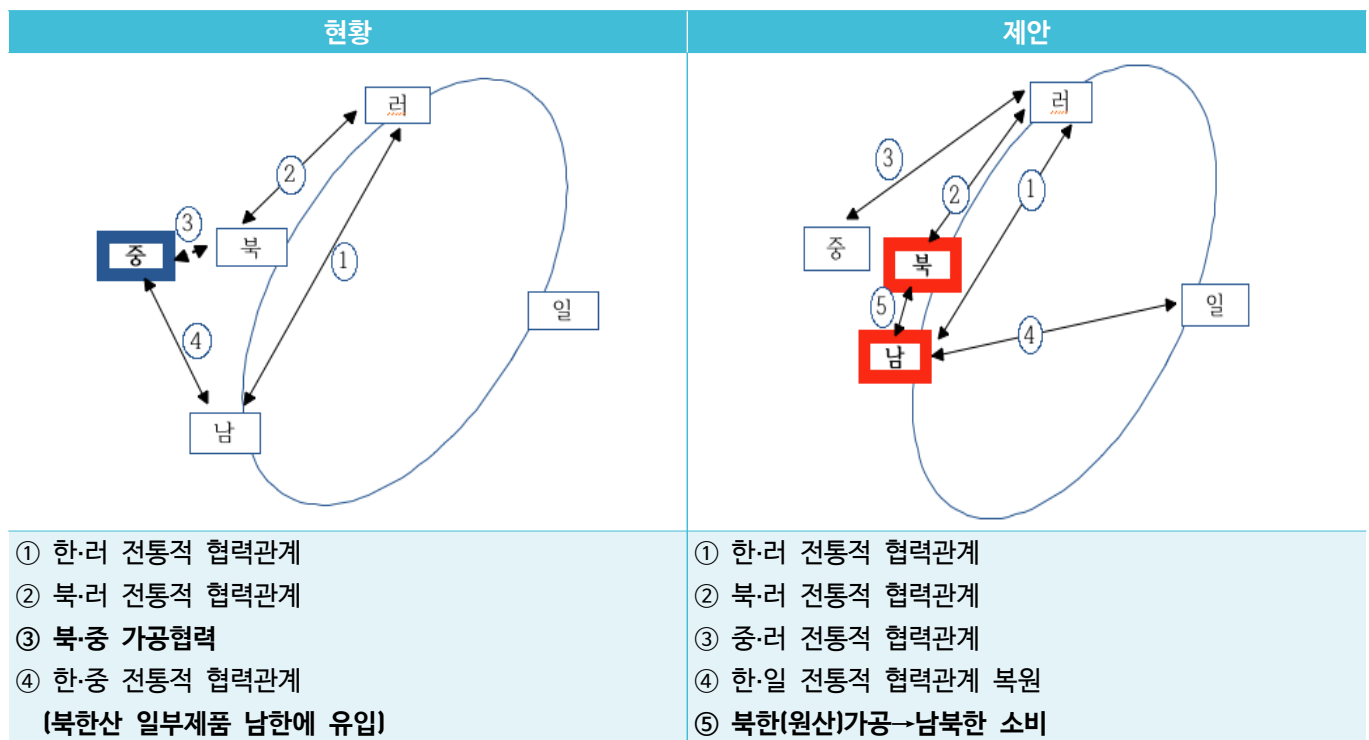
9) 이정삼·류정곤·기해경, “중국 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입어동향과 대응방향”, 『수산경영론집』, 48(3), 2017, p. 62.

명태는 주요 서식지가 북한 측 일부 어장과 일본의 북측 어장, 러시아 북측 베링해에 주로 분포한다. 가공을 거치지 않고 명태를 직접 식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남한과 북한, 중국 북동부 일부 지역이다. 명태는 다양한 산업유발 효과로 이어진다. 남한의 북부(인제, 고성), 중국 북부(훈춘), 북한의 강원(원산) 일대에서 가공되어 소비지로 유통되고 있다.

남한에서 냉동명태를 이용한 소비 형태는 다양한 가공 산업을 생성시킨다.¹⁰⁾ 특히 ‘러시아산 원료→중국/북한 가공→남한 소비’라는 초국경 분업구조를 형성시켰다.¹¹⁾ 따라서 명태는 환동해권역 다자간 수산협력 틀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산 생태(선어)는 대부분 남한에서 소비되기도 한다. 한 때 일본산 선어 명태는 남한이 최대 수입국이었으나 환동해 명태 수산협력에서 현재 일본의 참여는 미미하다. 이러한 분업구조는 남한을 중심으로 역내 모든 국가가 관련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향후 제안하는 환동해 다자간 명태 수산협력에서 중심 국가는 남한이다. 남한의 명태 수요에 맞춰 당사국 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이 원산을 중심으로 환동해 명태 수산협력의 표면에 나선다면 명태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명태 수산협력 현황과 제안



10) 김종천·장영수·강효슬·김지웅, “명태 산업 중소기업의 생산성 추정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50(2), 2019

11) 전 세계 명태 최대 소비국은 중국이다. 중국에서는 필렛으로 가공하여 대부분 유럽, 미국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은 어획, 수입된 모든 명태 원료는 국내 소비용으로 사용한다.

붉은대게, 오징어, 명태의 산업적 의미와 지역협력

3품목은 환동해 연안국 간 정치·경제 관계에 따라 왜곡된 유통망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통망 구성단위는 기업이다. 관련 수산 기업들은 남·북·일·중 국적의 기업소 및 중소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은 북한산 수산물 유통을 위해 북·중 접경지역에 상주하거나 접경지 수산 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환동해 수산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협력단위도 기업이다. 환동해산 3품목을 취급하는 수산 기업은 역내 특정 지역의 특화된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기업들이 속한 환동해 연안국 지역은 수산 품목 거래 이외의 다양한 협력체를 구성해 왔다. 특히 북한의 원산시와 일본의 사카이미나토시는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경험적 사례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 두 도시는 북·일 간 정치군사적 긴장이 팽배해지기 시작하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교류협력을 지속시켜왔다. 이러한 지역 간 협력은 붉은대게를 포함한 수산협력이 주도했다. 이는 현재 환동해 연안국 간 정치·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긍정적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향후 환동해 연안국 간 협력은 지역과 기업 단위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알려드립니다]

「북한해양수산리뷰」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소)논문, 칼럼 투고

- 주제: 북한 해양수산 및 남북 해양수산 협력
- 분량 및 형식: (소)논문의 경우 A4 10매 내외, 칼럼은 A4 2매 내외 이며, 형식은 자유
(단, 게재 시 연구진과 협의 후 조정)
-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독자의견 및 Q&A

- 독자의견: 500자 내외의 「북한해양수산리뷰」에 대한 소감, 자유 형식
- Q&A: 북한 해양수산 및 해양수산 남북협력에 대한 질문, 형식 및 분량 제한 없음
(연구진에서 질문을 선별해 다음 호에 Q&A 코너를 통해 답변)
- 게재 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독자 투고 및 의견, 질문 보내실 곳: nkreview@kmi.re.kr